

데스크 칼럼

정현아

경제부장



최근 서울 익선동에 다녀왔다. MZ세대 핫플로 뜨는 동네라는 말을 듣고 눈요기, 밥요기 겸해서 발걸음을 했다. 이른 점심시간인데도 좁은 골목길은 어깨를 비껴야만 지나닐 수 있을 정도로 붐볐고, 좀 알려진 음식점에는 어김없이 대기줄이 이어졌다. 옛 서울 서민들이 살던 집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그리 특이할 것도 빼어난 것도 없는 그냥 그런 평범한 동네였다. 하지만 지명이 왠지 신기하고 신비로운 느낌인 것부터 관심을 끌었고, 낡은 한옥을 상가로 개조해 콘텐츠를 덧입히니 내외국인이 앞다뒀 찾는 명소가 되고 있었다.

하지만 호기심을 갖고 시작했던 ‘힙’한 동네 구경은 불과 한시간여 만에 본전을 드러내고 말았다. 우선은 공간적인 협소함. 사방 100~200m 남짓인 아담한 동네이다 보니 몇걸음 떼다보면 발길이 막혔다. 일단은 공간이 넉넉해야 더 많은 콘텐츠를 넣든 입히든 할텐데 좁은 것이 일차적인 한계였다.

아울러 서울이라는 정체성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콘텐츠라 해봐야 식당과 찻집, 소품가게 등이 대부분이었다. 브런치 메뉴를 간판으로 한 양식과 퓨전 한식, 약간의 초밥과 디저트 가게가 먹거리의 주류를 이뤘다. 음식은 질과 골목을 지키는 요리 철학 보다는 젊은이들 겨냥한 씽크방한 맛에 더 초점이 맞춰진 듯했다. 타로점과 캐리커처 등 약간의 체험거리도 있었지만 훗날 마음을 들게 하기에 다소 부족한 느낌이었다. 기념품 등 살거리도 빈약했다.

기고

조순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형평지사장



최근 대통령은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문제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보험의 신뢰를 해치는 구조적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발언 이후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대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병원을 말한다. 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건강권 위협, 병원의 안전관리 미흡, 과잉진료 및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은 1775개 기관, 총 환수 결정된 금액은 2조5000여억원에 이르지만 환수율은 고작 8.5%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코로나19 환자치료비로 공단이 지출한 금액인 약 3조3060억원과 비교해 보아도 적지 않은 금액이 그간 사무장병원에서 부당청구했다고 보면 된다.

이는 수가 약 5% 인상할 수 있는 금액으로 국민들이 받아야 할 의료혜택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한 결과 불법개설기관은 수사

익선동 유감

흔히 말하는 관광의 충족요건은 보고, 먹고, 사고 또는 체험하고 ‘3고’다. 이런 기준에 맞춰보면 익선동은 아쉽지만 ‘귀여운 실험실’ 또는 아마추어 수준의 단기 흥행지역으로 평가함이 적절해졌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관광지는 큰 흐름을 따라 형성됐다. 날씨 좋고 풍광 좋은 세계 곳곳에는 전장에 투입된 미군들의 휴양소가 맨 먼저 들어섰다. 그런 곳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당시 소득이 높았던 유럽인들이 찾아들었고 아시아 대표투자자였던 일본이 뒤를 따랐다.

그리고 해외여행에 진심인 한국인들이 합류하면서 그 관광지는 꽃을 피웠다. 이후에는 중국인, 지금은 인도인들이 세계여행의 주력군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유럽과 동남아시아 관광지에 중국인과 인도인들이 넘쳐났다.

이제는 한국 차례다. 지난해 세계를 휩쓴 케데헌 열풍에 힘입어 K-관광이 다시 힘을 얻었다. 우선 한국을 찾는 관광객의 국적이 다양해졌다. 미국과 일본, 중국 중심에서 이젠 유럽과 인도, 중동 국가 사람들이 한국을 찾는다. 두 번째 변화는 젊은층의 관광이 급속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K-뷰티와 K-콘텐츠 등 인기 덕에 누리는 호재다.

또다른 변화는 서울, 부산, 제주 등 주요 관광지 중심에서 ‘그 밖의 다른 곳’으로 확대되는 경향이다. 한국의 주요 관광지로 충청도가 1위로 올라선 것도 이런 흐름에 힘입은 듯 하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인도 관광객이 20만 명이나 됐다고 한다.

그 가운데 4만 여명이 벚꽃을 보러왔나니 의외다.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이 관심을 갖는 곳이 한국의 산이다. 도시 가까이 높은 산이 있는 곳이 세계적으로 드물고, 풍경 또한 특색있고 아름답다고 입을 모은다. 관광객의 국적과 연령층, 관심사의 다변화가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나타나면서 업계의 고민도 깊어진다.

전주에 가면 물지도 따지지도 않고 비빔밥을 찾는다. 전주 사람들은 “그 흔한 비빔밥을 왜 찾는지 모르겠다”고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지만, 전주하면 떠오르는 음식은 단연 비빔밥이다. 식재료에 따른 메뉴도 다양하고 가격대도 합리적이다.

해장국도 부러운 메뉴다. 전주 남부시장에서 팔던 콩나물 해장국을 ‘상품’으로 만들고, 프랜차이즈라는 ‘시스템’으로 구축해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남도 하면 음식이다. 특히나 광주·전남의 전통 한정식은 육해공 식재료를 만든 수십 가지의 반찬에 상다리가 휘다. 깊은 손맛에 다양한 양념으로 담은 김치는 전국 어느 김치와 비교불가의 자원이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 더 이상의 확장성이 없다. 남도음식 메뉴의 표준화는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다양하지만 남도음식을 한줄로 꿰어낼 교집합을 만들지 못한다.

양림동 펜션마을에 이어 광주 대표 핫플인 동명동 등은 그런대로 인기가 있지만 그 다음은 어디가 될지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

최근 광주관광공사의 수장이 바뀌었다. 다행히 사장 취임 이후 노사·노노 갈등을 낳았던 승진 인사가 원대로 마무리되면서 업무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관광공사는 대표 관광 BI 구축, 주문형 스마트 관광 플랫폼 구축, 양질의 국제·전국 행사 유치 등 3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역사·미식을 통합한 정체성, 브랜드 강화, 광주 고유 자산을 결합한 시그니처 행사 기획 및 스마트 MICE 체계 구축 등 거창한 구상을 제시했다. 걱정이 앞선다. 진짜 절실한 몇 가지라도 찾고,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해냈으면 좋겠다. 서울의 익선동도 좋고 전주 남부시장도 좋다. 한번 가보고 먹어보시라. 그리고 광주 관광을 소생시킬 ‘대박 잇템’을 찾길 바란다.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특사경 도입 서둘러야

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되는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이 가능한데(건보법 제47조의2), 경찰의 전문 수사인력 부족과 사건 우선순위에 밀려 수사외의 후 결과까지 평균 11개월이 소요, 불법개설기관으로 흘러가는 요양급여비 청구비용을 조기에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한다.

공단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전문조사인력이 배치됐고 조사 유경험자만 200여명에 달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을 갖고 있어 수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 시스템에서는 수사권이 없어 제차 추적 불가로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방조자·참고인 등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해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본질은 의료인의 진료 행위가 아니라, 비의료 자본이 의료기관을 지배하는 불법 구조에 있다. 이 구조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정직한 의료기관을 불법 기관과 동일선상에 놓이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다.

하지만 의사와 약사 단체가 특사경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의료는 고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전제로 운영되는 영역이며, 과도한 수사 개입은 진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따라서 이번 논의의 출발점은 단속 강화가 아니라, 정상적인 의료 활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여야 한다. 특사경 도입이 의료인을 관리·통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

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더 이상 단순한 불법 개설 문제가 아니다. 처방 운영, 명의 대여, 허위 서류, 조직적 증거 인멸 등으로 수사 회피가 구조화된 범죄 집단에 가깝다. 그럼에도 현행 수사체계는 의료·약사법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행정·수사의 분절로 인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점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다만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접근은 오히려 갈등만 키울 수 있다.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개혁’이라면, 해법 역시 그 방향에서 찾아야 하며, 연내 입법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참여와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사경 대상과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개설 및 운영 범죄로 한정하고, 일반 진료 행위는 원칙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의료 위축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특히 대통령 발언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보건복지부·지자체·수사기관 간 협업을 이끄는 분명한 정책 신호가 뒤따라야 한다.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중대 범죄행위이며 의료를 이윤의 수단으로 삼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이제는 특사경 입법으로 답해야 할 때다.

통합 논의가 길어질수록 말하는 쪽과 듣는 쪽의 거리는 조금씩 벌어진다. 설명하는 늘었지만 질문은 늘 비숫하고, 답은 제자리를 맴돈다. 같은 말이 반복되고, 다른 각정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다. 이 틈이 커질수록 통합은 희망이 아니라 논쟁의 대상이 된다.

통합은 행정구역을 합치는 일 만이 아니다. 서로 다른 삶의 조건을 인정하고, 불안과 기대를 함께 다루는 과정이다. 광주와 전남은 같은 미래를 바라보지만, 서 있는 자리는 다르다.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로 가는 길은 오히려 멀어진다.

선거는 몇 년의 일정이지만, 통합은 여러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칠 선택이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 통합은 구조로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라, 이해를 쌓아 올려 할 과제다. 쉬운 말로 설명하고, 반복해서 묻고, 납득될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다. 통합이 그 내일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 때, 이 논의는 비로소 시민들의 선택으로 완성될 것이다.

사설

신안우이 해상풍력, 기금 확보로 속도 난다

전남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날개를 달았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이를 1호 투자처로 선정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이 프로젝트에 7500억원 규모의 선·후 순위 대출자로 참여해 18~19년 장기기간 저리로 대출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본격적인 자금집행은 올해 3분기부터 이뤄진다고 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 관련 공약으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이차전지·수소·미래차·방산·로봇 등 10대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150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펀드를 말한다.

이 프로젝트는 비수도권 AI 인프라 조성이라는 상징성과 지역 균형발전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1호 투자처로 낙점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총 사업비 3조4000억원에 달하는 이 프로젝트는 신안군 우이도 남측 해상에 15MW급 발전기 26기를 설치해 발전용량 390MW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한화오션, SK이터닉스, 현대건설 등이 참여한다. 순수 국내 자본과 기술력으로 국내 최초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추진되는 셈이다.

올 상반기 착공해 약 3년간 건설을 거쳐 2029년부터 본격 가동되며 완공되면 4인 가구 기준 29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고 한다.

향후 지역에 구축될 국가 AI컴퓨팅센터 등 많은 전력 수요에 대비한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을 갖추게 된 것으로 더 나아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도 할 수 있게 됐다.

또 이 프로젝트는 신안군 주민도 일정 부분 채권투자자로 참여하고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바람소득'형태로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상징성이 있는 만큼 한국산업은행과 은행권도 공동 조성한 미래에너지펀드도 이 사업에 2040억원은 출자, 3400억원은 후순위 대출 형식으로 총 544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두 펀드의 지원 금액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등 재무적 안정성까지 확보한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청년 떠나가는 광주, 성장동력 악화될라

‘흑시나’했는데 ‘역시나’였다. 지난해에도 일지리를 찾아 광주·전남을 등지고 타지로 떠나는 현상은 여전했다. 아니,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인구 이동은 더 심화됐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연간 국내인구이동 통계’에는 지역, 특히 광주의 인구유출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보여주고 있다.

지난 한 해에만 총전입 16만3000명, 총전출 17만7000명으로 1만4000명의 순유출을 보이며 인구 순유출률 -1.0%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총 전입 17만2000명, 총 전출 18만명으로 8000명의 순유출을 보인 2024년도도 순유출 규모가 무려 6000명 가량 늘었다. 무엇보다 80세 이상(0.5%)과 10세 미만(0.1%)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유입인구보다 유출이 더 많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2030 인구 감소가 뚜렷했는데 30대 순유출률은 -1.6%로 전국 최고였고 20대 역시 -3.0%의 순유출 흐름을 보이며 청년층 전반의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전남은 총전입 18만6000명, 총전출 18만4000명으로 2000명의 순유입을 기록하며 전체 인구 기준으로 소폭 순유입(0.1%)을 유지했다. 총전입 18만4000명, 총전출 18만 8000명으로 4000명이 감소한 지난해와 달리 인구가 소폭이나마 늘어난 것이다. 인구는 늘었지만 청년층 감소 흐름은 막지 못했다.

20대 순유출률이 -3.1%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고 10대 역시 -0.7%의 순유출을 기록한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지역의 일자리와 교육, 주거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예컨대 광주의 경우 직업과 교육을 이유로 젊은 층이 서울·경기권으로 떠나는 현상이 전입보다 더 많아 인구 순유출로 이어진 반면 전남은 청년층의 직업·교육 이동은 여전했지만 ‘가족’, ‘자연환경’ 등을 이유로 들어온 인구가 이를 상쇄하고도 남아 순유입이 나타났다. 이는 것이다.

문제는 지역 청년 유출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 노동력 부족과 소비 위축, 그리고 지역 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역 성장 동력 악화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어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취재수첩

행정통합, 시민은 묻는다

이현규

정치부 부장



통합이라는 말이 자주 들릴수록, 사람들의 표정은 오히려 복잡해진다. 광주와 전남을 하나로 묶자는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시·도민들의 마음은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분명하다. 통합이 왜 필요한지보다, 통합 이후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도민들이 던지는 질문은 어렵지 않다. 행정 처리

는 더 빨라지지는, 병원과 학교는 가까워지지는, 일자리는 늘어나지는, 내 지역이 소외되지는 않는지다. 모두 일상의 문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설명은 제도와 구조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법과 조직의 틀은 제시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될 사람들의 모습은 설명하지 않다.

광주·전남 정치권은 통합을 기회라고 말한다. 지금이 아니면 어렵다는 말도 반복한다. 하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속도가 아니다. 신뢰다.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이 선택이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남기는지, 부담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솔직한 설명이 필요하다. 설득이 부족한 추진은 기대보다 걱정을 먼저 키운다.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 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40 경 제 부 370-7020 산 업 부 370-7010 사 회 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문 집 부 370-7082	370-7040 370-7020 370-7010 370-7030 370-7234 370-7082	는 설 실 370-7200 임 월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370-7200 370-7000 370-7093 370-7090 370-7070 370-708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사 진 부 370-7050	서울지사 ☎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
---------------	---